

교육공무원 징계 의결 요구(신청)서

1. 인적사항	성명 (한글) 윤■근 (한자) 尹■根	생년월일 1972. 6. ■
	소속 목포해양대학교 해상■	직위(직급) 교수
	재직기간 13년 1월 (2008. 9. 1. ~ 현재)	
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■ (인사기록카드 등재 주소지이나 미거주 확인 - 실 거주지 확인 불가)		
2. 징계사유	<p>교수 윤■근은 2008. 9. 1.부터 현재까지 목포해양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자이다.</p> <p>교육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56조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,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,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할 뿐 아니라,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그러나 교수 윤■근은 2020. 11. 30.자로 청원휴직 기간이 종료된 후 2020. 12. 1.자 복직하여야 함에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은 채 모든 연락을 두절하였고, ■까지 ■ 징계처분에 관한 의사표현을 포함하여 근무지복귀 의사 등을 일절 표명하지 않았다. 특히 교육자로서 학기 개시일에 맞춰 성실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및 학생지도라는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<u>정당한 의사표시 없이 근무지 이탈 상태를 지속하였고, 2020. 12. 1.자 및 2021. 3. 30.자 2차례의 근무지 복귀명령에 불응함으로써 복종의 의무 또한 위반하였다.</u></p> <p>이후 교수 윤■근은 2021. 5. 17.자 작성한 해외동반 휴직원을 우편으로 대학에 제출하여 업무복귀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, 대학은 2021. 8. 19.자 공시송달을 통하여 “2021. 8. 31.까지 근무지로 즉시 복귀할 것”을 추가 명령하였다. 그럼에도 윤■근은 2021. 8. 30.자 전자우편을 통해 업무복귀가 어렵다는 의사를 재차 밝혀 복종 및 근무지 이탈 금지 의무위반을 지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, ■자 부과된 징계부가금 정수를 위한 국세청 전산망 조회결과 <u>국적상실 상태임이 확인(2021. 6. 22. 목포해양대학교에 결과 통보)되어 더 이상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명분 또한 상실한 상태이다.</u></p> <p>한편 2019. 11월 교육부는 종합감사 결과를 근거로 교수 윤■근에 대해 ① 허위 공문서 작성, ②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, ③ 사서명 위조, ④ 위조 사서명 행사, ⑤ 업무상 배임, 이상 5가지의 죄목으로 검찰에 형사고발하였고, 검찰은 윤■근의 ‘소재불명’으로 수사 진행이 어려워 기소중지하게 되었음을 2020. 4. 6.자 공문으로 통보하였다.</p> <p>이는 높은 도덕성을 지니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잊은 행위로,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,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.</p> <p>교수 윤■근의 이와 같은 행위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56조 내지 제58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.</p>	
3. 징계 의결 요구(신청)	징계요구에 적시된 비위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56조 내지 제58조 및 제63조를 위반한 것으로 “중징계”로 징계의결 요구하는 것임	
권자의 의견	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여부 [] 해당됨 [V] 해당 없음	



「교육공무원 징계령」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 의결을 요구(신청)합니다.

2021년 9월 27일

징계 의결 요구(신청)권자 목포해양대학교총장



귀중

목포해양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